

보도자료2  
(상세본)

이 자료는 2024년 1월 23일(화) 15:00 보도부터  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

2024. 1. 23.

기획재정부



# **목 차**

## **1. 소득세법 시행령**

|   |    |
|---|----|
| (1)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(2)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(3)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| 2  |
| (4)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..                   | 3  |
| (5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|
| (6)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|
| (7)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.....                    | 6  |
| (8)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(9) 보험모집인의 수당 환수액 성격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(10) 근로자 출산·양육지원금 손금·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| 8  |
| (11) 사용자 본인의 고용·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.....                     | 8  |
| (12)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(13)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(14)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|
| (15)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(16)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|
| (17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| 14 |
| (18)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(19)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|
| (20) 농수산물 중·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<br>특례 적용기한 연장 ..... | 17 |
| (21)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(22)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(23)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 |
| (24)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(25)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(26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 |

## <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>

- (1)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..... 22
- (2)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..... 23
- (3)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..... 23
- (4)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
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..... 24
- (5)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..... 25

## < 국제조세 >

- (1)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-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  
납부세액분 포함 ..... 26
- (2)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.. 27

## 2. 법인세법 시행령

- (1)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..... 28
- (2)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..... 29
- (3)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..... 30
- (4)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
  -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..... 31
  - ② 합병·분할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 
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..... 32
  -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..... 33
- (5)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 
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..... 34
- (6)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
  -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..... 35
  -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... 36
  -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... 37
- (7)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... 38
- (8)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..... 39
- (9)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..... 40

|  |    |
|--|----|
| (10)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.....       | 41 |
| (11)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..... | 42 |
| (12)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.....         | 43 |
| (13)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| 44 |
| (14)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.....       | 44 |
| (15)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..   | 45 |
| (16)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.....        | 46 |
| (17)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.....         | 47 |
| (18)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.....           | 49 |

### 3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.....     | 50 |
| (2)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신설 ..... | 51 |
| (3)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.....       | 52 |
| (4) 일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.....       | 53 |
| (5) 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.....      | 54 |
| (6) 서화·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.....        | 55 |

### 4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|  |    |
|--|----|
| (1)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..... | 56 |
| (2)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.....              | 57 |

### 5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..... | 58 |
| (2)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.....       | 58 |
| (3)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.....        | 59 |
| (4)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.....         | 60 |
| (5) 어린이집 운용(위탁)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.....  | 61 |
| (6)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.....    | 62 |
| (7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.....        | 62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8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.....      | 63 |
| (9) 위탁·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 ..... | 64 |
| (10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.....   | 65 |
| (11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.....      | 65 |
| (12)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 .....   | 66 |
| (13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.....   | 66 |
| (14)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.....   | 67 |

## 6.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|  |    |
|--|----|
| (1) 수소제조용 석유가스(LPG)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.....               | 68 |
| (2)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<br>관리 완화 ..... | 68 |

## 7. 주세법·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|  |    |
|--|----|
| (1) 맥주·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..... | 70 |
| (2)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| 71 |
| (3)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·승인 기간 연장 .....         | 72 |
| (4)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.....       | 73 |

## 8. 인지세법 시행령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..... | 74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# 9.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·정비 ..... | 75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# 10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### < 소득세제 >

|   |    |
|---|----|
| (1)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| 76 |
| (2) 외국인기술자·근로자·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..... | 77 |
| (3)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.....  | 78 |

|  |    |
|--|----|
| (4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.....  | 79 |
| (5)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..... | 80 |
| (6) 근로·자녀장려세제 .....                    | 81 |
|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.....                   | 81 |
|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.....            | 82 |
| (7)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.....      | 83 |

## < 법인세제 >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.....           | 84  |
| (2) R&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84  |
| (3) R&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| 85  |
| (4)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| 86  |
| (5)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①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| 87  |
| ②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.....             | 88  |
| (6)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.....         | 89  |
| (7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90  |
| (8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.....         | 91  |
| (9)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  |
| (10)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<br>계산방법 보완 ..... | 92  |
| (11)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.....            | 93  |
| (12)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| 94  |
| (13)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  |
| (14)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·         | 96  |
| (15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| 97  |
| ② 동업기업의 소득금액·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98  |
|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99  |
| (16)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| 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1 |

|  |     |
|--|-----|
| (17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.....           | 102 |
| (18)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 .....           | 103 |
| (19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· | 104 |
| (20)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.....            | 105 |
| (21)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.....     | 106 |
| (22)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.....        | 107 |
| (23)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.....        | 108 |
| (24)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  | 110 |

### < 증여세 · 양도소득세제 >

|  |     |
|--|-----|
| (1)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.....                 | 111 |
| (2) 농·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<br>계산 방법 합리화 ..... | 112 |
| (3)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13 |
| (4)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| 114 |
| (5)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·              | 115 |
| (6)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16 |

### < 금융세제 >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투자신탁형 창업·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17 |
| (2) 특수목적펀드예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·                      | 118 |
| (3)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19 |
| (4) 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·                     | 120 |
| (5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편입대상 K-OTC 중소·중견기업<br>주식 범위 합리화 ..... | 121 |
| (6)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2 |
| (7)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3 |
| (8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24 |
| (9)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5 |

### < 부가가치세제 >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.....      | 126 |
| (2)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.....        | 126 |
| (3)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· | 127 |



## 11. 국세기본법 시행령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8 |
| (2)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9 |
| (3) 국세예규심사위원회,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<br>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..... | 130 |
| (4)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1 |
| (5)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2 |
| (6)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                     | 133 |
| (7)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4 |
| (8)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5 |
| (9)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35 |
| (10)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6 |
| (11)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7 |
| (12)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38 |
| (13) 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9 |
| (14)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40 |
| (15)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.....                   | 140 |

## 12. 국세징수법 시행령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.....                  | 141 |
| (2)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<br>근거 추가 ..... | 142 |
| (3)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.....              | 143 |

## 13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|  |     |
|--|-----|
| (1) 특정외국법인(CFC)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.....    | 144 |
| (2)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    | 145 |
| (3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.....         | 146 |
| (4)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..... | 147 |
| (5)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.....           | 148 |

|   |     |
|---|-----|
| (6)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9 |
|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9 |
| 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|
| ③ 추가세액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.....             | 151 |
| 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.....                  | 152 |
| 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3 |
| 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154 |
| 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5 |
| 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<br>부과면제 요건 규정 ..... | 156 |

## 14. 관세법 시행령

|  |     |
|--|-----|
| (1)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.....            | 157 |
| (2)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·보관 방법 구체화 .....      | 158 |
| (3)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.....     | 159 |
| (4)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.....         | 160 |
| (5)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.....         | 161 |
| (6)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.....               | 162 |
| (7)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.....           | 163 |
| (8)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.....               | 164 |
| (9)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..... | 165 |
|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.....            | 165 |
|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.....              | 166 |
|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·주기·기한 등 규정 .....        | 167 |
| ④ 전송요구 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 .....           | 168 |
|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.....              | 169 |
|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.....   | 170 |
| (10) 일시적 수출입 제한·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..... | 171 |
| (11)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.....   | 172 |
| (12)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.....         | 173 |
| (13)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.....                | 174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(14)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.....          | 175 |
|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| 175 |
| ②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| 176 |
| (15)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.....   | 177 |

## 15. 기타 개정사항

\* 과세자료법 시행령,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, FTA관세법 시행령,  
WTO 양허관세 규정,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

|   |     |
|---|-----|
| (1)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.....                    | 178 |
| (2)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.....          | 179 |
| (3)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.....          | 180 |
| (4)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.....        | 181 |
| (5) 부가가치세 영세율·사후환급 적용대상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확대 · | 182 |
| (6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.....   | 183 |
| (7)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·    | 184 |
| (8)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·     | 185 |



# 1. 소득세법 시행령

## (1)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(소득령 §9①, §9의5)

###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2) >

- ☐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양식어업소득 비과세<br><br>○ (소득구분) 농어가부업소득*<br>* 축산·고공품제조·민박·특산물제조·양어소득 등<br><br>○ (비과세 한도) 3,000만원<br>-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<br><br>○ 어업소득*<br>* 어로어업·양식어업 소득<br><br>○ 3,000만원 → 5,000만원<br>-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|

〈개정이유〉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,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# (2)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(소득령 §10의2)

###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2(3)마) >

- ☐ 「사립학교법」 §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
- 한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 규정<br>○ 월 150만원 |

〈개정이유〉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# (3)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(소득령 §16①(1)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<br>○ 일반 국외 근로자: 월 100만원<br>○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: 월 300만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확대<br>○ (좌 동)<br>○ 월 300만원 → 월 500만원 |

〈개정이유〉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4)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
(소득령 §16①(2)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</p> <p>○ 공무원, 「외무공무원법」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코트라, 코이카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</p> <p>-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*</p> <p>* 「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」(문체부 훈령) §2(5)에 따른 "행정직원"</p> <p>- 산업인력공단 직원</p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5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(소득령 §17의3, §18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2(3)어, (5)라) >

- 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
- 구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</p> <p>○ (대상) 종업원, 교직원,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*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</p> <p>* 「발명진흥법」 §2(2)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</p> <p>○ 연 500만원 → 연 700만원</p> <p>-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</p> <p>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: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</p> <p>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: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* 및 그와 특수관계**에 있는 자</p> <p>* 법인세법 시행령 §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</p> <p>**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p> |

<개정이유> 기술개발 유인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

(6)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(소득령 §17의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택제공 이익 등</li> <li>○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·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>-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</p> <p>①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:<br/>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</p> <p>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:<br/>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*에 해당하는 종업원</p> <p>* (법인령 §43⑦) 1%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</p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 형평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7)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
(소득령 §17의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</li> <li>○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·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</li> <li>○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*</li> </ul> <p>*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<br/>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(영유아보육령 §25)</p> |

〈개정이유〉 출산·보육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8)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(소득령 §40의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*<br>*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<br><br>○ (추징)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*<br>*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 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<br><br>○ (반환)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방식 변경<br><br>○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*으로 간주<br>*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(15%) 부과<br><br>○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|

〈개정이유〉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

(9)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(소득령 §51③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<br>○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|

〈개정이유〉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

(10) 근로자 출산·양육지원금 손금·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
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 및 필요경비의 범위<br><br>○ 판매한 상품·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·부대비용<br><br>○ 인건비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<br><br>○ (좌 동)<br><br>○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·양육 지원금<br>*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|

<개정이유> 근로자의 출산·양육 지원

(11) 사용자 본인의 고용·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(소득령 §55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<br><br>○ 사용자 본인의 직장·지역 건강보험료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<br><br>○ (좌 동)<br><br>○ 사용자* 본인의 고용·산재 보험료<br>* 자영업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등 |

<개정이유>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

(12)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(소득령 §80①(3)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</p> <p>○ 「법인령」 §39① 각 호*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</p> <p>* 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, 종교법인 등</p> <p>○ 아래 요건(❶+❷+❸+❹)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</p> <p>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「상증세법」 §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</p> <p>❷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</p> <p>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</p> <p>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등과 舊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§20(13)*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</p> <p>*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(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%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❹ 위탁자등*이 ❶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<br/>(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%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)</p> <p>* 위탁자 + 위탁자와 「국기법 시행령」 §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</p> |

〈개정이유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

(13)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(소득령 §80③,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<br>○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<br>❶ 결산보고서: 행정안전부장관<br>❷ 수입명세서: 관할 세무서장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기한 연장<br>○ 3개월 이내 → 4개월 이내<br>○ (좌 동) |

〈개정 이유〉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14)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(소득령 §8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□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<br/>필요경비 산입 한도</p> <p>○ (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)</p> <p>- 기준소득금액* - 이월결손금</p> <p>*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</p> <p>○ (우리사주조합기부금)</p> <p>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<br/>정치자금기부금 - 특례기부금]<br/>× 30%</p> <p>○ (일반기부금)</p> <p>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<br/>정치자금기부금 - 특례기부금 -<br/>우리사주조합기부금] × 30%</p> <p>*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<br/>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<br/>특례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</p> | <p>□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<br/>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</p> <p>○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</p> <p>- (좌 동)</p> <p>○ (우리사주조합기부금)</p> <p>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<br/>정치자금기부금 - 고향사랑<br/>기부금 - 특례기부금] × 30%</p> <p>○ (일반기부금)</p> <p>-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<br/>정치자금기부금 - 고향사랑<br/>기부금 - 특례기부금 - 우리<br/>사주조합기부금] × 30%</p> <p>*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<br/>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<br/>고향사랑기부금 → 특례기부금 →<br/>우리사주조합기부금</p> |

〈개정이유〉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 
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(15)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(소득령 §8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기부금의 범위</p> <p>○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특례기부금</p> <p>○ 특별재난지역*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(①+②)</p> <p>① 봉사일수(=총봉사시간÷8)<br/>× 5만원</p> <p>-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</p> <p>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·재료비 등 직접비용</p> <p>&lt;단서 신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① 5만원 → 8만원</p> <p>- (좌 동)</p> <p>② (좌 동)</p> <p>-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</p> |

〈개정이유〉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

(16)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(소득령 §108의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담보노후연금(역모기지)<br>이자비용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제대상 소득) 연금소득</li> <li>○ (대상주택)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</li> <li>○ (한도) 연 200만원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기준시가 12억원* 이하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<br/>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</li> </ul> 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 
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

(17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(소득령 §112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52⑤) >

- 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 
(5억원 이하 → 6억원 이하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<br>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억원 이하 주택·분양권을<br/>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<br/>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<br/>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</li> <li>○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<br/>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<br/>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</li> <li>-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<br/>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<br/>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<br/>상환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<br>이전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억원 이하 → 6억원 이하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<br/>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<br/>상환하는 경우도 포함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(차입금 연장)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 
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
(차입금 이전)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 
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(18)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(소득령 §116의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적용대상)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</li> <li>○ (공제금액) 발급 건수당 200원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19)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(소득령 §118의5①, 조특령 §117의3④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</p> <p>○ (대상 비용)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</li> <li>- 총급여액 7천만원(사업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(한도: 200만원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(공제율) 15%</p> <p>○ (공제 한도)</p> <p>❶ 본인,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, 장애인: 공제한도 미적용</p> <p>❷ ❶ 외의 부양가족: 700만원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(한도: 200만원)</li> <li>- 장애인활동지원급여*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</li> </ul> <p>*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❶ (좌 동)</p> <p>❷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출산·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(20) 농수산물 중·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 
 특례 적용기한 연장(소득령 §147의6, 법인령(제15970호, '98.12.31.)  
 부칙 §14, 법인령(제18706호, '05.2.19.) 부칙 §14)

| 현행  | 개정안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|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|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|--|----|----|----|--|--|
| <div>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농수산물 중·시장도매인*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</div><div>*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도매인·시장도매인</div><div><div>○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*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</div><div>*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·제출액의 비율</div><div><div>○ 계산서 발급비율(%)</div><table><tr><th colspan="2">사업연도<br/>지역</th><th>'19</th><th>'20~'21</th><th>'22~'23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중도매인</td><td>서울</td><td>85</td><td>90</td><td>95</td></tr><tr><td>서울 외</td><td>65</td><td>70</td><td>7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시장도매인(법인)</td><td>85</td><td>90</td><td>95</td></tr></table></div><div><div>○ 적용기한 : '23.12.31.까지</div></div></div></div> <div>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</div><div><div>○ (좌 동)</div><div><div>○ 계산서 발급비율(%) 조정</div><table><tr><th colspan="2">사업연도<br/>지역</th><th>'19</th><th>'20~'21</th><th>'22~23</th><th>'24~25</th><th>'26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중도매인</td><td>서울</td><td>85</td><td>90</td><td colspan="3">95</td></tr><tr><td>서울 외</td><td>65</td><td>70</td><td>75</td><td>80</td><td>8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시장도매인(법인)</td><td>85</td><td>90</td><td colspan="3">95</td></tr></table></div><div><div>○ '26.12.31.까지</div></div></div></div> | 사업연도<br>지역 |     | '19     | '20~'21 | '22~'23 | 중도매인 | 서울 | 85 | 90 | 95 | 서울 외 | 65 | 70 | 75 | 시장도매인(법인) |  | 85 | 90 | 95 | 사업연도<br>지역 |  | '19 | '20~'21 | '22~23 | '24~25 | '26 | 중도매인 | 서울 | 85 | 90 | 95 |  |  | 서울 외 | 65 | 70 | 75 | 80 | 85 | 시장도매인(법인) |  | 85 | 90 | 95 |  |  |
| 사업연도<br>지역  |            | '19 | '20~'21 | '22~'23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중도매인  | 서울         | 85  | 90      | 95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  | 서울 외       | 65  | 70      | 75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시장도매인(법인)   |            | 85  | 90      | 95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사업연도<br>지역  |            | '19 | '20~'21 | '22~23  | '24~25  | '26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중도매인  | 서울         | 85  | 90      | 95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  | 서울 외       | 65  | 70      | 75      | 80      | 85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| 시장도매인(법인)   |            | 85  | 90      | 95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|  |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|  |    |    |    |  |  |

〈개정이유〉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21)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(소득령 §149의3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86) >

- 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<br>○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·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|

〈개정이유〉 사업소득(인적용역 소득) 원천징수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22)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(소득령 §18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용역 대가(사업소득)에 대한 원천징수<br>○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|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<br>○ (좌 동)<br>○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*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<br>* 「약사법」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, 응급환자·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,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|

〈개정이유〉 사업소득(의료용역 소득) 원천징수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23)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(소득령 §212의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의 부도·폐업</li> <li>○ 공급 계약의 해제·변경</li> <li>○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사유 규정 추가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</li> <li>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(24)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(소득령 별표2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59의2) >

☐ 자녀세액공제 확대

- (적용대상)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→ 손자녀 추가
- (공제금액)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세액 5만원 상향

\* (첫째/둘째/셋째 이상) (현행) 15/15/30만원 → (개정) 15/20/30만원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세액표*<br>*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|

〈개정이유〉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4.3.1.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

(25)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(소득령 별표3의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 상대업종<br>○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업종 추가<br>○ (좌 동)<br>○ 애완동물 장묘·보호서비스업, 유사의료업 |

〈개정이유〉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

(26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(소득령 별표3의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의무발행*대상</p> <p>*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</p> <p>① 변호사 등 전문직</p> <p>②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 등</p> <p>③ 일반교습학원, 외국어학원 등</p> <p>④ 가구소매업, 전기용품·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</p> <p>⑤ 골프장운영업, 음식점업 등 기타 업종</p> <p>* 전체 125개 업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발행대상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(좌 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13개 업종*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**</p> <p>* ①여행사업,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, ③수영장운영업, ④스쿼시장 등 그외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, ⑥실내경기장 운영업, ⑦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, ⑧볼링장운영업, ⑨스키장운영업,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, ⑪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, ⑫앰불런스 서비스업,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</p> <p>**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</p> |

〈개정이유〉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 <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>

### (1)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(소득령 §152의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(① 또는 ② 또는 ③) | <input type="checkbox"/>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 |
| ① 30세 이상인 경우  | ○ (좌 동)   |
|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<br>(⇒ 가 + 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소유 주택·토지를 관리·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(좌 동)  |
| 나.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12개월간 정상적·반복적 소득*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% 이상 |
|   | *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(저작권 수입,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) 등    |

〈개정이유〉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(2)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(소득령 §152의4)

###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88) >

- ☐ 세법상 주택 개념에 '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'일 것을 포함·구체화
-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의 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, 화장실,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(3)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(소득령 §154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(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)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산 취득일~양도일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방법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(또는 용도변경일)~양도일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

(4)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
거주기간 판정 합리화(소득령 §154⑫·§159의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<br><br><b>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</b><br><br><b>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</b><br><br>⇒ 공동상속주택의 경우<br>: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*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<br><br>*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<br>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<br>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<br>③ 최연장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판정기준 합리화<br><br>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10px;">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</div> </div><br><br>⇒ 공동상속주택의 경우<br>: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<b>가장 긴 기간</b> 으로 판단 |

〈개정이유〉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5)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 
1년 연장(소득령 §167의3·§167의4·§167의10·§167의1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□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</p> <p>○ 지방저가주택(주택 수에서도 제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<p>○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'22.5.10.부터 '24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</p> <p>○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</p> <p>○ 동거분양, 혼인, 취학, 근무,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</p> | <p>□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<b>한시배제 1년 연장</b>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'24.1.10.~'25.12.31.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수에서도 제외)</p> <p><b>① 소형 신축주택*</b></p> <p>* 1) 면적: 전용면적 60m<sup>2</sup> 이하<br/>2) 취득가액: 수도권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<br/>3) 준공시점: '24.1.10.~'25.12.31.<br/>4) 주택유형: 아파트 제외</p> <p><b>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*</b></p> <p>* 1) 면적: 전용면적 85m<sup>2</sup> 이하<br/>2) 취득가액: 6억원 이하<br/>3) 주택 소재지: 비수도권</p> <p>○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'22.5.10.부터 '25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

## < 국제조세 >

(1)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-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  
세액분 포함(소득령 §117, 법인령 §9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<br><br>○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<br>외국소득(법인)세액(가산세 제외)<br><br>-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<br>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<br>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<br><br><단서 추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<br>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<br>포함<br><br>○ (좌 동)<br><br>- 단,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<br>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<br>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|

<개정이유> 이중과세 방지

<적용시기> '23.8.8.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

(2)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 
(소득령 §216의5 신설)

—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64의5 신설) > —

- 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\*을 행사·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

\*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

-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,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</p> <p>○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</p> <p>- 내국법인의 주식을 50%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*</p> <p>*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§45①(1)</p> <p>○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</p> <p>-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·지점, 외국법인의 주식을 50%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*</p> <p>*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§45②(1), (2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기준보상 정의</p> <p>○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</p> <p>○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</p> |

〈개정이유〉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2. 법인세법 시행령

### (1)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(법인령 §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<br>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(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li>○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<br/>목*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) 국민연금사업</li> <li>2) 특별법 및 인·허가 받은 단체의<br/>기금조성 및 급여사업</li> <li>3)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<br>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(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)<br/>외의 농업</li> <li>○ 연금 및 공제업<br/>→ 연금업이나 공제업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



## (2)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(법인령 §3의2)

### < 법 개정내용(법인법 §5②) >

☐ 목적신탁·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 적용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수탁자 과세요건) ①~③에 해당<br>① ❶~❷에 해당하는 경우<br>* ❶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(목적신탁)<br>❷ 「신탁법」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<br>❸ 유한책임신탁(사업신탁)<br>❹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로서 수익배분의 유보나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<br>② 수익자가 2이상일 것<br>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하지 않을 것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요건 합리화<br>① (좌 동)<br><br><삭 제><br>③ (좌 동)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위탁자 과세요건) ①~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br>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<br>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<br>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<br><br><삭 제><br><br><삭 제><br>③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신탁세제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## (3)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(법인령 §10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</li> <li>○ (예외)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</li> <li>- 회생계획·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</li> <li>- 유동화전문회사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특법 §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*</li> </ul> <p>* [조특법 §74①]<br/> (1) 학교법인·산학협력단 등<br/> (2) 사회복지법인<br/> (3) 국립대학병원 등<br/> (7)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<br/> (8)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% 이상인 「공익법인법」상 공익법인<br/> (9) 공무원연금공단 등<br/> [조특법 §74④]<br/>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</p> |

**<개정이유>**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

**<적용시기>**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(4)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

#####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(법인령 §1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과세 제외</li> <li>○ (예외) ❶~❸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이익</li> <li>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<br/>(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)</li> <li>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(합병차익 한도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평가이익</li> <li>-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<br/>(1% 재평가적립금 등)</li> <li>- 이익잉여금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 법인의 다음 금액(분할차익 한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평가이익</li> <li>- 분할감자차익(1% 재평가 적립금 등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><b>❺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*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**</b></p> <p>*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<br/>         ** 발행가액 - 액면가액</p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합병·분할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 
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(법인령 §17)

< 법 개정내용(법인법 §18) >

- ☐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합병·분할차익에 포함된  
3%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  
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합병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</p> <p>○ 합병차익 - (① - ②)</p> <p>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<br/>자본준비금(3% 재평가적립금 제외)의 합계액</p> <p>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<br/>한도금액</p> <p>○ 분할차익 - (① - ②)</p> <p>①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<br/>준비금(3% 재평가적립금 제외)의 감소액</p> <p>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</p> <p>○ 3% 재평가적립금</p> <p>* 3%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<br/>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<br/>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</p> <p>○ 이익잉여금, 과세대상 자본잉여금</p> <p>○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<br/>것으로 보아 계산</p> |

<개정이유>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(법인령 §7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div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 종전 장부가액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<br/>과세되지 않은 금액</div> |

〈개정이유〉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

(5)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(법인령 §17의2⑤ 신설)

— < 법 개정내용(법인법 §18의2②) > —

- 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
- 재평가적립금 및 합병·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
  -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</li> </ul> </li> <li>○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(6)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

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 
(법인령 §11, §19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□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</p> <p>○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</p> |
| <p>□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</p> <p>○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</p> <p>○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</p>     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(법인령 §70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실제 보험료·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</li> <li>○ (예외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·비용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 기준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손실* 손익인식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 <input type="checkbox"/>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 |

<개정이유>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(법인령 §63·§19의2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</li> </ul> </li> <li>○ (손금산입) 충당금적립금의 Max[1%, 구상채권발생률]</li> <li>○ (귀속시기)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7)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
(법인령 §19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·중견기업</li> <li>○ 직·간접적으로 100% 출자한 해외현지법인</li> <li>○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% 미만인 경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국법인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</li> </ul> </li> </ul> |

**<개정이유>**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

**<적용시기>**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(법인령§2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, 가산세 등</li> <li>○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</li> <li>○ 벌금, 과료, 과태료</li> <li>○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</li> <li>○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</li> <li>○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height: 200px; margin: 10px 0;">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장애인고용부담금</p> |

〈개정이유〉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

(9)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(법인령 §2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□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</p> <p>○ (대상)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「가맹사업법」 「신용정보법」<br/>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「제조물 책임법」<br/>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「파견법」<br/> 「기간제법」 「하도급법」<br/> 「대리점법」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<p>○ (손금불산입액)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</p> <p>- 다만,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β</p> | <p>□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</p> <p>○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「남녀고용평등법」 「상표법」<br/> 「농수산물품질법」 「식물신품종법」<br/> 「대규모유통업법」 「실용신안법」<br/> 「상생협력법」 「자동차관리법」<br/> 「공정거래법」 「중대재해처벌법」<br/> 「디자인보호법」 「축산계열화법」<br/> 「부정경쟁방지법」 「특허법」<br/> 「산업기술보호법」 「환경보건법」</p> </div> <p>○ (좌 동)</p> <p>-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손금불산입액 = <math>A \times \frac{B-1}{B}</math></p> <p>A: 지급한 손해배상금<br/> B: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</p>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

(10)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
(법인령 §50의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<br><br>○ 업무전용보험가입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 요건 강화<br><br>○ (좌 동)<br><br>○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*<br><br>*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(‘24.1.1. 시행) |

〈개정이유〉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

〈적용시기〉 ’24.1.1.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11)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
범위 확대(법인령 §6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<br>자산가액 손금산입<br><br>○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<br>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<br>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<br><br>-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」,<br>「전기사업법」, 「사회기반시설<br>민간투자법」, 「철도공사법」,<br>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도시 및<br>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산업재해<br>보상보험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법률 추가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</div><br>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|

<추 가>
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〈개정이유〉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12)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(법인령 §68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품 등 판매 : 인도일</li> <li>○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:<br/>대금청산일, 소유권 이전등기일,<br/>인도일,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</li> <li>○ 건설등 용역 제공 :<br/>작업진행률 기준</li> </ul> <p>* (예외)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,<br/>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,<br/>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<br>기준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<br/>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·<br/>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<b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<br/>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(법인령 §7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의 취득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입가액에 취득세·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</li> <li>○ 제조·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·노무비·운임 등의 합계액</li> <li>○ 「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」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'0'원</li> <li>○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」 및 「대기관리권역법」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'0'원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법령 명확화

(14)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가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
(법인령 §72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div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증자합병*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: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<br/> +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<br/> - 현금 등 지급액</p> |

〈개정이유〉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



(15)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 
신청절차 보완(법인령 §86의3 · §120의4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0의15 · §100의16 · §100의18) > —

☐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\*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

\*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을 받은 주주등·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</p> <p>○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 |

〈개정이유〉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16)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
(법인령 §120의18①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범위<br><input type="radio"/>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<br>-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<br>- 매출채권, 대여금 등 채권<br>-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<br>- 토지와 건축물<br>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<br>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<br><br>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height: 100px; margin: 0 10px;"></div> <div>           - (좌 동)         </div> </div><br><input type="radio"/> 외국법인의 주식등(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) |

〈개정이유〉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(17)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

(법인령 §120의17④, §120의22, §120의26)

### < 법 개정내용(법인법 §76의19⑤) >

- ☐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받음
- ☐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을 지급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</p> <p><b>①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</b></p> <p>= (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× 조정 연결세율)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6f2ff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<br/>: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- 각 연결법인의 연결 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</li> <li>■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<br/>: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</li> <li>■ 조정 연결산출세액<br/>: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</li> <li>■ 조정 연결세율<br/>: 조정 연결산출세액 ÷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</li> </ul> </div> <p><b>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</b></p> <p>= (연결산출세액 - 조정 연결산출세액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math display="block">\times \frac{\text{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}^*}{\text{연결집단 전체 결손금}^*}</math> </p> <p>*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</p> <p><b>③ 결손금 공제·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: ①의 금액 + ②의 금액</b></p> |

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</p> <p>①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</p> <p>= (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× 조정 연결세율)</p> <p>②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</p> $= \text{조정 연결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}^*}{\text{연결집단 전체 결손금}^*}$ <p>*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</p> |
| <p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</li> <li>○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</li> </ul>  |

〈개정이유〉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18)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 
(법인령 §159의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(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) 현금영수증가맹점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<br>- 신고자 성명<br>-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<br>-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(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)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<br>- (좌 동)<br>-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<br>-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법령 명확화

### 3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#### (1)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(상증령 §46)

— 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53의2⑤) > —

- ☐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반환특례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혼자의 사망</li> <li>○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*</li> </ul> <p>*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,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, 불치병, 그 밖의 중대한 사유(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)</p> |

〈개정이유〉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(2)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(상증령 §46)

— 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53의2⑤) > —

- ☐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**시행령으로**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
- ❶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: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
- ❷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: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면제 범위 <p>❶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</p> <p>- 단, 부정행위*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</p> <p>*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·공제를 받은 경우</p> <p>❷ 납부지연가산세</p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: 증여세액 × ❶ × ❷ <p>❶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</p> <p>❷ 1일 10만분의 22</p> |

〈개정이유〉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### (3)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(상증령 §1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속인의 가업종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</li> <li>-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</li> <li>-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</li> </ul> </li> <li>○ 자산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 처분 금지</li> </ul> </li> <li>○ 지분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○ 고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규직 근로자 수 9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% 이상 유지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유지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중분류 → 대분류</li> <li>- (좌 동)</li> </ul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height: 150px; margin: 0 auto; width: 20px;">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가업상속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



#### (4)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(상증령 §1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</li> <li>○ 2년 이상 가업에 종사</li> <li>○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</li> <li>○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인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</li> <li>○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*</li> </ul> <p>*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</p>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</li> </ul> <p>*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</p>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사후관리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산 40% 이상 처분 금지</li> <li>○ 상속받은 지분 유지</li> <li>○ 정규직 근로자 수 9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% 이상 유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 |

〈개정이유〉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

(5)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(상증령 §38 · §41의2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□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</p> <p>○ 의무지출액</p> <p>- 출연재산 가액의 1%</p> <p>* 주식 10% 초과 보유 공익법인 : 3%</p> <p>○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</p> <p>-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</p> <p>-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</p> <p>○ 지출실적 산정기준</p> <p>-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</p> | <p>□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</p> <p>- (좌 동)</p> <p>- (좌 동)</p> <p>- 다만,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</p> <p>○ ①, ② 중 선택 가능</p> <p>①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</p> <p>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</p> |

〈개정이유〉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6) 서화·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(상증령 §52②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□ 서화·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</p> <p>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</p> <p>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</p> <p>- Max(감정평가액,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단서 신설&gt;</b></p> | <p>□ 평가방법 개선</p> <p>① 2인 이상의 전문가<br/>→ 2개 이상의 전문기관</p> <p>② 평가방법 개선</p> <p>- (좌 동)</p> <p>- 다만,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<br/>(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)</p> |

〈개정이유〉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 
분부터 적용

## 4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### (1)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(종부령 §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대주택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원용 주택, 기숙사 등</li> <li>○ 등록문화재, 노인복지주택 등</li> <li>○ 임대주택의 부속토지,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산배제 주택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*(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,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## (2) 다주택자 종과배제 주택 추가(중부령 §4의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<br>○ 일시적 2주택,<br>지방 저가주택 등<br><br><b>&lt;추 가&gt;</b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유형 추가<br>○ (좌 동)<br><br>○ '24.1.10.~'25.12.31. 중 취득한<br>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주택<br><br><b>① 소형 신축주택*</b><br>* 1) 면적: 전용면적 60m <sup>2</sup> 이하<br>2) 취득가액: 수도권 6억원,<br>비수도권 3억원 이하<br>3) 준공시점: '24.1.10.~'25.12.31.<br>4) 주택유형: 아파트 제외<br><br><b>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*</b><br>* 1) 면적: 전용면적 85m <sup>2</sup> 이하<br>2) 취득가액: 6억원 이하<br>3) 주택 소재지: 비수도권 |

〈개정이유〉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## 5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### (1)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(부가령 §11⑥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<br>○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권등록 대상 확대<br>○ (좌 동)<br>○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(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) |

〈개정이유〉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

### (2)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(부가령 §11⑪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<br>○ (예외)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<br>- 담보신탁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<br>○ (좌 동)<br>- (좌 동)<br>- 「자본시장법」의 무체재산권 신탁업, 「저작권법」의 저작권 신탁관리업, 「기술이전법」의 기술신탁관리업 |

〈개정이유〉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

(3)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(부가령 §30(4) 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</p> <p>○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</p> <p>❶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</p> <p>❷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</p> <p>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 대상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❹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</p> |

〈개정이유〉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(4) 면제하는 의료보전 용역의 대상 확대(부가령 §35(18)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대상 의료보전 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</li> <li>○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을 위탁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대상 의료보전 용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전 용역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전사업 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

(5) 어린이집 운용(위탁)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
(부가령 §36①(8) 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하는 교육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</li> <li>- 허가·인가 또는 등록·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</li> <li>- 청소년수련시설</li> <li>- 산학협력단</li> <li>-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</li> <li>-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어린이집(위탁운영 포함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출산·보육 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6)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
(부가령 §41③ 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<br>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<br/>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<br/>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의 연면적</li> <li>-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(도시<br/>지역 외 10배)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<br/>임대부 분양주택(국민주택규모<br/>이하 한정)을 분양받은 자에게<br/>제공하는 토지의 임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</p> |

〈개정이유〉 주거안정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(부가령 §42(1)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<br>가치세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저술·음악·무용·배우·<br/>가수·감독·직업운동가 등</li> <li>○ (요건)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<br/>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요건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<br/>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<br/>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<br/>사용하지 아니할 것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

(8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(부가령 §42(2)아·자 신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·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</p> <p>○ (대상)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선번호인의 국선번호 등</li> <li>-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</li> <li>-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</li> <li>-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</li> <li>-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</li> <li>-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</li> <li>-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범위 확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근로자파견·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·건설·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</p> |

〈개정이유〉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위탁·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(부가령 §69⑬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·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*<br>*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<br>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<br>○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<br>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<br>한국전력거래소(중개인) 명의로<br>세금계산서 발급 등<br>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 사유 추가<br><br>○ (좌 동)<br><br>○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<br>사용자에게 전력등을 공급시<br><b>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</b><br>(중개인)의 명의로 세금계산서<br><b>발급·수취 허용</b> |

**<개정이유>** 납세 편의 제고

**<적용시기>**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(부가령 §71의2②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기한 확대<br>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 이내 → 1년 이내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(부가령 §71의2⑬ 신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의 부도·폐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 계약의 해제·변경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div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사유 규정 추가<br>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]</div> <div>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          </div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[</div> <div>             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<br/>             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</div> </div>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(12)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(부가령 §88④(4) 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<br>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</li> <li>○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</li> <li>○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증빙서류 확대<br><br>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판매대행·중개자*가 국세청에<br/>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</li> </ul> </div> </div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<br/>판매 대행·중개자</p> |

〈개정이유〉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(부가령 §89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적용대상) 직전 연도의<br/>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<br/>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</li> <li>○ (공제금액) 발급 건수당 200원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확대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<br/>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14)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(부가령 §91의2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* 적용요건</p> <p>*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,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·납부</p> <p>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(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)</p> <p>② 수출비중·수출액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소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</li> <li>- (중견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</li> </ul> <p>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</p> <p>④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</li> </ul> <p>⑤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</p> <p>⑥ 최근 3년간 「조세범처벌법」 또는 「관세법」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⑥ 3년간 → 2년간</p> |

〈개정이유〉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

## 6.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### (1) 수소제조용 석유가스(LPG)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(개소령 §2의2)

| 현 행   |       |      |      | 개 정 안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---|--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유가스(LPG)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<br>(원/kg) |       |      |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(기본세율의 △30%)<br>(원/kg)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|
| 구분  |       | 기본세율 | 탄력세율 | 구분  |             | 기본세율 | 탄력세율  |
| 부탄  |       | 252  | 275  | 부탄  | 일반          | 252  | 275   |
|   |       |      |      |   | 수소제조용       |      | 176.4 |
| 프로판   | 일반    | 20   | -    | 프로판   | 일반          | 20   | -     |
|   | 가정상업용 |      | 14   |   |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|      | 14    |

〈개정이유〉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4.1.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 
부터 적용



(2)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 
및 사후관리 완화(개소령 §19의3, §3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□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요건 및 사후관리</p> <p>○ (대상)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○ (한도) 300만원 한도 내</p> <p>○ (사후관리)</p> <p>- (원칙) 5년 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시 개별소비세 신고·납부</p> <p>- (예외)</p> <p>▪ 구입자가 5년 내 사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□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취학·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▪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</p> <p>▪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</p> <p>▪ 자녀의 사망</p> <p>▪ 자녀의 취학·질병,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</p> |

〈개정이유〉 면세 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(적용대상)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 분부터 적용  
(사후관리)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## 7. 주세법·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(1) 맥주·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(주세령 §7)

#### < 법 개정내용(주세법 §8①) >

##### ☐ 맥주·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

- 주종간 과세형평,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(기본세율의  $\pm 30\%$ )로 세율 조정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율<br>(물가연동제 반영)<br><br>○ '23.4.1.부터 '24.3.31.까지<br>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<br>- (맥주) 1ℓ 당 885.7원<br>- (탁주) 1ℓ 당 44.4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<br>결정 규정 삭제<br>※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            &lt;삭 제&gt;           </div> |

### <개정이유>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
(2)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(주세령 §3, 별표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 제조시 제조원료<br><b>❶</b> 발아된 맥류, 홉<br><b>❷</b> 녹말이 포함된 재료*, 당분, 캐러멜, 기타재료<br>* 보리, 밀, 쌀, 옥수수, 귀리, 호밀, 수수, 감자, 전분 등<br><b>❸</b> 첨가제<br>(아스파탐, 스테비올 배당체 등)<br>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 제조시 허용원료 추가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height: 150px; margin: 10px 0;"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(좌 동)</p><br><b>❹</b> 빵(밀가루, 가공유지, 이스트,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), 다량어포, 굴 |

〈개정이유〉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 
분부터 적용

(3)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·승인 기간 연장 (주류면허령 §30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* 사용 신청절차</p> <p>* 제조된 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측정기계</p> <p>- 자동계수기 사용시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</p> <p>① (주류제조자의 신청)<br/>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<br/>7일 전까지 신청</p> <p>② (지방국세청장의 승인)<br/>신청일부터 5일 이내<br/>승인 여부 통지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및 승인기간 연장</p> <p>① 7일 전 → 10일 전</p> <p>② 5일 이내 → 7일 이내</p> |

〈개정이유〉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·승인절차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(주류면허령 §41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□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</p> <p>○ (적용대상) 주류 제조·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</p> <p>○ (금지행위)</p> <p>❶ 장려금·할인·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·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</p> <p>❷ 시음주, 주류교환권을 승인 없이 무상제공</p> <p>❸ 주류·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수수하는 행위</p> | <p>□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</p> <p>○ 주류 의제판매면허자 추가</p> <p>❶ 장려금·할인·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·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 합리화

## 8. 인지세법 시행령

### (1)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(인지령 §2의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<br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도급문서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<br>○ (좌 동)<br><br>○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및 「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」에 따른 도급문서 |

〈개정이유〉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

## 9.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
### (1)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· 정비(농특령 §4⑦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li> <li>○ 농어업인, 농어업인 조합</li> <li>○ 중소기업,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</li> <li>○ 서민주택·저축 등 감면</li> <li>○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</li> <li>○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·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</li> <li>○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R&amp;D세액공제 · 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</li> <li>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1조 제3항·제73조제2항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비과세 대상 추가 및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공대학* 및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</li> </ul> </li> <li>-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*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「도시재생법」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 제고 및 조문정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## 10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### < 소득세제 >

#### (1)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(조특령 §16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(30만\$ 이상)에 따른 기술 제공자</li> <li>❷ 아래 요건(㉠+㉡+㉢+㉣)을 모두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자연·이공·의학계 학사 이상</li> <li>㉡ 국외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</li> <li>㉢ 과세연도 종료일(12.31)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*가 없을 것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*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§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li> <li>㉣ 연구기관,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율) 10년간 50%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26.12.31.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㉣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망 클러스터*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

(2) 외국인기술자·근로자·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 
요건 보완(조특령 §16, §16의2, §16의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기술자·근로자·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* 적용 배제 요건</p> <p>* ❶ (법 §18)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<br/>         ❷ (법 §18의2)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<br/>         ❸ (법 §18의3)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</p> <p>○ 과세연도 종료일 (12.31)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*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</p> <p>*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§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</p> <p>○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</p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 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 
분부터 적용

(3)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 
비과세 적용(조특령 §16의2)

— 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8의2) > —

- 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 
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
- 구체적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<br>○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|

〈개정이유〉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4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(조특령 §27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청년<sup>*</sup>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~34세로, 병역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 이행시 그 기간(6년 한도)을 연령에서 차감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율) 70% (청년은 9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기간) 3년 (청년은 5년)</li> <li>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 등<br/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div> 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26.12.31.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업종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컴퓨터학원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 
 분부터 적용

(5)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 
(조특령 §80의3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□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</p> <p>○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</p> <p>① 폐업·해산, ② 가입자 사망<br/>③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<br/>④ 60세 이상 &amp; 10년 이상 납입</p> <p>&lt;추 가&gt;</p> | <p>□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*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</p> <p>* 「협동조합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⑤~⑧의 사유가 추가될 예정</p> <p>○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(중간정산) 시 퇴직소득 과세</p> <p>① ~ ④ (좌 동)</p> <p>⑤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<br/>⑥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<br/>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<br/>⑧ 희생결정 또는 파산선고</p> |
| <p>□ 퇴직소득 과세 시 근속연수 산정방법</p> <p>○ 공제부금 납입월수 ÷ 12</p> <p>&lt;추 가&gt;</p>  | <p>□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÷ 12</p>   |

〈개정이유〉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6.1.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## (6) 근로·자녀장려세제

###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(조특령 별표11의2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0의28, §100의29) > —

#### 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및 최대지급액 인상

- (소득요건) 홑벌이·맞벌이가구 4,000만원 → 7,000만원 미만
- (최대지급액) 자녀 1인당 80만원 → 100만원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<br>자녀장려금 지급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|

〈개정이유〉 출산·양육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##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

(조특령 §100의4, §100의5, §100의7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양자녀, 중복신청, 홀별이가구 판단 우선순위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양자녀 중복 시 판단기준 적용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❶ 상호합의로 정한 자<br/>→ ❷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<br/>→ ❸ 총급여액 많은 자<br/>→ ❹ 산정금액 많은 자<br/>→ ❺ 직전에 수급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장려금 중복신청, 홀별이가구 판단시 적용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❶ 상호합의로 정한 자<br/>→ ❷ 총급여액 많은 자<br/>→ ❸ 산정금액 많은 자<br/>→ ❹ 직전에 수급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판단 우선순위 변경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❶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<br/>→ ❷ 총급여액 많은 자<br/>→ ❸ 산정금액 많은 자<br/>→ ❹ 직전에 수급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장려금 신청자, 홀별이가구 판단 적용순위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❶ 총급여액 많은 자<br/>→ ❷ 산정금액 많은 자<br/>→ ❸ 직전에 수급 받은 자</li> </ul> </li> </ul>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위 순서로 거주자의 부양자녀, 근로장려금 신청자, 홀별이가구 여부 결정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위 순서로 결정하되,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   |

〈개정이유〉 중복신청 등 발생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(조특령 §121의2⑥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세, 지방세, 전기료 등</li> <li>○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</li> <li>○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</li> <li>○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</li> <li>○ 이자상환액, 금융·보험용역 관련 수수료·보증료 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금액 추가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</li> <li>○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</li> </ul>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 형평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 < 법인세제 >

### (1)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(조특령 §2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<br><br>○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(외국법인 포함)이 주식 등의 30%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<br><br><b>&lt;추 가&gt;</b><br><br>○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<br><br>○ (좌 동)<br><br>-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·방법* 규정<br>*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,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<br><br>○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

### (2) R&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(조특령 별표6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R&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<br><br>○ 퇴직소득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<br><br>○ 4대 사회보험*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<br>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|

〈개정이유〉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(3) R&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 (조특령 별표7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3개 분야* 258개 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미래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S/W, ④콘텐츠, ⑤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 ⑧에너지·환경, ⑨융복합소재, ⑩로봇, ⑪항공·우주, ⑫첨단 소재·부품·장비, ⑬탄소중립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4개 분야 270개 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분야) 방위산업 신설</li> <li>- (기술) 신규 15개, 확대 8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신규) 15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규 기술 추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에너지·환경(3개)</td><td>대형원전 제조기술 등</td></tr> <tr> <td>로봇(1개)</td><td>Non-coding 교시기술</td></tr> <tr> <td>첨단소부장(5개)</td><td>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</td></tr> <tr> <td>탄소중립(3개)</td><td>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</td></tr> <tr> <td>방위산업(3개)</td><td>추진체계 기술 등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▪ (확대) 8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기술 범위 확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미래형자동차(1개)</td><td>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<br/>→ 운행기록 추가</td></tr> <tr> <td>바이오·헬스(2개)</td><td>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<br/>→ 제조기술 추가 등</td></tr> <tr> <td>에너지·환경(2개)</td><td>친환경 원전해체 기술<br/>→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</td></tr> <tr> <td>로봇(1개)</td><td>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<br/>→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</td></tr> <tr> <td>탄소중립(2개)</td><td>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<br/>→ 항공유 추가 등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 분야 | 세부기술 | 에너지·환경(3개) |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| 로봇(1개) | Non-coding 교시기술 | 첨단소부장(5개) |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| 탄소중립(3개) |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| 방위산업(3개) | 추진체계 기술 등 | 분야 | 세부기술 | 미래형자동차(1개) |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<br>→ 운행기록 추가 | 바이오·헬스(2개) |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<br>→ 제조기술 추가 등 | 에너지·환경(2개) |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<br>→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| 로봇(1개) |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<br>→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| 탄소중립(2개) |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<br>→ 항공유 추가 등 |
| 분야  | 세부기술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에너지·환경(3개)  |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로봇(1개)  | Non-coding 교시기술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단소부장(5개)   |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탄소중립(3개)  |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위산업(3개)  | 추진체계 기술 등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야  | 세부기술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형자동차(1개)  |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<br>→ 운행기록 추가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바이오·헬스(2개)  |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<br>→ 제조기술 추가 등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에너지·환경(2개)  |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<br>→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로봇(1개)  |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<br>→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탄소중립(2개)  |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<br>→ 항공유 추가 등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개정이유> 미래 유망산업 R&D 투자 활성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(4)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(조특령 별표7의2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전략기술 대상<br>○ 7개 분야 62개 기술*<br>* ①반도체 22개, ②이차전지 9개,<br>③백신 7개, ④디스플레이 5개,<br>⑤수소 6개,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,<br>⑦바이오의약품 8개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<br>○ 7개 분야 66개 기술<br><br>- (기술) 신규 4개, 확대 1개<br><br>▪ (신규) 4개<br><br>신규 기술 추가<br><table> <tr> 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 <tr> <td>디스플레이<br/>(1개)</td><td>OLED 화소형성·봉지 공정 장비<br/>및 부품 기술</td></tr> <tr> <td>수소<br/>(3개)</td><td>수소 가스터빈(혼소·전소) 설계<br/>및 제작 기술 등<br/>수소환원제철 기술<br/>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</td></tr> </table><br>▪ (확대) 1개<br><br>현행 기술 범위 확대<br><table> <tr> <th>분야</th><th>세부기술</th></tr> <tr> <td>반도체<br/>(1개)</td><td>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<br/>→ HBM 등 추가</td></tr> </table> | 분야 | 세부기술 | 디스플레이<br>(1개) | OLED 화소형성·봉지 공정 장비<br>및 부품 기술 | 수소<br>(3개) | 수소 가스터빈(혼소·전소) 설계<br>및 제작 기술 등<br>수소환원제철 기술<br>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| 분야 | 세부기술 | 반도체<br>(1개) |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<br>→ HBM 등 추가 |
| 분야  | 세부기술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디스플레이<br>(1개)   | OLED 화소형성·봉지 공정 장비<br>및 부품 기술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소<br>(3개)  | 수소 가스터빈(혼소·전소) 설계<br>및 제작 기술 등<br>수소환원제철 기술<br>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야  | 세부기술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반도체<br>(1개)   |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<br>→ HBM 등 추가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개정이유> 첨단 전략산업 R&D 투자 활성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 (5)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### ①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

(조특령 §11의4)

####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2의4) >

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시 해당 주식등 취득기간\* 확대

\* (종전)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
(개정)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: ① 또는 ②</p> <p>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×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p> <p>② 매입가액 -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×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법 개정에 따른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정비</p> <p>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× 기준충족사업연도*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p> <p>* 취득 주식등이 출자총액의 50%(경영권 확보시 30%)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사업연도</p> <p>② 매입가액 -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×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p> |

〈개정이유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·인수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 상향 (조특령 §11의3③·§11의4④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과세특례) '기술가치금액'의 10%를 합병·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</li> <li>○ (기술가치금액*) Max(㉠, 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</li> <li>- ㉠: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</li> <li>- ㉡: 양도가액 - 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30%)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양도가액 - 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20%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·인수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

(6)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  
조항 정비(조특령 §12의2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<br>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<br>*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<br>및 배당소득 비과세(조특법§13)가 적용<br>되는 내국법인 제외<br><br><b>① 벤처투자회사</b><br><br><b>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</b><br><br><b>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</b><br><br><b>④ 기금운용법인등</b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외대상 추가<br><br><b>①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</b><br><br>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height: 10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10px auto;">  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 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벤처투자 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(조특령 §22의10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5의6) >

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❶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❷추가공제 신설

\* ❶ (종전) 대 3% / 중견 7% / 중소 10% → (개정) 대 5% / 중견 10% / 중소 15%  
 ❷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대·중견 10% / 중소 15%

○ 구체적인 추가공제 세부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<br>(❶, ❷ 모두 충족)<br>❶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% 이상<br>❷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<br>㉠ 작가·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% 이상<br>㉡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% 이상<br>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% 이상<br>㉣ 주요 IP* 중 3개 이상 보유<br>*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방송권, 전송권, 공연권, 복제권, 배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 |

<개정이유>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

(8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22의11)

|  |  |
|--|--|
|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5의8) >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<br>○ 중소·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3% 세액공제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복지원 적용대상 배제<br>○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(제작사)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자금액·비용의 판단시점<br>○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|

〈개정이유〉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9)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(조특령 §26의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<br>○ (환산식) (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) ÷ (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) × 12<br>○ (적용대상) 근로소득금액, 평균임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<br>○ (좌 동)<br>○ 근로소득금액 |

〈개정이유〉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 
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(조특령 §26의8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□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</p> <p>○ 정규직 근로자* : 1명</p> <p>*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, 특수관계인 등 제외</p> <p>- 출산휴가자*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</p> <p>*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(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)</p> <p>○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: 0.5명</p> <p>○ 일정요건*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: 0.75명</p> <p>* ①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<br/>②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<br/>③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,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<br/>④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% 이상</p> | <p>□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(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)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(11)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 
상향(조특령 §6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</p> <p>○ (어로어업소득)<br/>3,000만원 × 조합원수 ×<br/>(사업연도 월수 ÷ 12)</p> <p>○ (어로어업 외 소득)<br/>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<br/>(사업연도 월수 ÷ 12)</p> | <p>□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</p> <p>○ (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)<br/>3,000만원 × 조합원수 ×<br/>(사업연도 월수 ÷ 12)</p> <p>○ (어로어업 · 양식어업 외 소득)<br/>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<br/>(사업연도 월수 ÷ 12)</p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

〈시행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12)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(조특령 §6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□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소득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재배업소득 : 전액<br/>(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)</li> <li>○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:<br/>50억원 × 소득률<br/>(배당소득 분리과세)</li> <li>○ 작물재배업 외 소득 :<br/>5년간 50% 감면<br/>(배당소득 분리과세)</li> <li>-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<br/>축산업·임업 소득</li> <li>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<br/>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</li> <li>*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·공급<br/>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·종균배양<br/>③ 농산물 구매·비축<br/>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·수리·보관<br/>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·관리</li> <li>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<br/>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<br/>농작업 대행 소득</li> </ul> | <p>□ 감면 등 소득 범위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수입 농산물의 유통·판매<br/>소득은 제외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감면 등 대상 소득 명확화

(13)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(조특령 §99의6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□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</p> <p>○ (적용대상) 재기중소기업인</p> <p>① 중진공의 재창업자금<br/>융자를 받은 자</p> <p>② 신보·기보의 재창업자금<br/>융자를 받은 자</p> <p>③ 신용회복위원회의<br/>채무조정을 받은 자</p> <p>④ 중기부장관으로부터<br/>성실경영실패자로<br/>판정받은 자</p> <p>&lt;추 가&gt;</p> <p>○ (특례내용) ①압류·매각 유예<br/>및 재창업시 창업중소기업<br/>세액감면 적용,<br/>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<br/>납부기한 연장</p> | <p>□ 특례 적용대상 확대</p> <p>○ 재기중소기업인 확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<br/>융자를 받은 자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14)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 
관련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99의12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9의13) > —

☐ 내국인이 「소상공인법」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 
금지 조치\*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허용

\*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,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 
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조치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신청 등<br>○ 과세표준신고 시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<br>함께 제출 |

〈개정이유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

## (15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0의15 · §100의16 · §100의18) —

☐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\*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

\*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

###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(조특령 §100의15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제한*의 예외 적용대상<br>*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<br>○ 개인이 아닌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|

〈개정이유〉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② 동업기업의 소득금액·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(조특령 §100의18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·결손금의 구분</p> <p>○ (소득금액)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·법인세법상 구분*에 따른 소득으로 취급<br/>(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)</p> <p>* 거주자군·비거주자군·내국법인군·외국법인군</p> <p>○ (결손금) 동업자는 배분받은 결손금을 소득·법인세법상 구분*에 따른 결손금으로 취급</p> <p>* 거주자군·비거주자군·내국법인군·외국법인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시 소득금액·결손금 구분 규정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·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·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</p>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배분 제한</p> <p>○ (수동적 동업자) 배분 불가</p> <p>○ (능동적 동업자)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시 결손금 배분 제한 규정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, 상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결손금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</p> |

〈개정이유〉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소득계산 방법 규정

〈적용시기〉 '23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(조특령 §104의28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 방법</p> <p>○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방법 보완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 |

〈개정이유〉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## (16)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

###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(조특령 §100의32⑨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</p> <p>○ 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</p> <p>① 고용 증가없음 : 임금증가금액</p> <p>② 고용·임금 모두 증가<br/>: 기존근로자 임금증가금액* × 1.5<br/>+ 신규근로자 임금증가금액** × 2</p> <p>③ 청년 및 당기 정규직 전환<br/>근로자 수 증가시 추가 공제<br/>: 해당 임금증가금액 × 2<br/>(②, ③ 중복 산입 불가)</p> <p>○ 상시근로자 수</p> <p>-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<br/>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</p> <p>*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(조특법§26의4)<br/>규정 준용</p> <p>○ 임금증가금액</p> <p>-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<br/>연도의 임금*지급액 증가액</p> <p>* 소득세법상 근로소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수, 임금증가금액<br/>산정기준 일원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산정방식 구체화</p> <p>- (좌 동)</p> <p>-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<br/>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<br/>지급한 임금의 합계액</p> |

〈개정이유〉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

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(조특령 §100의32④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환류소득* 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<br/>기업소득 산정방법 :<br/>각 사업연도 소득 + 가산항목 - 차감항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미환류소득 : ㉠ 또는 ㉡를 선택하여 산정</p> <p>㉠ 투자포함방법 = [기업소득 × 70% - (투자액 + 임금<br/>증가액 + 상생협력 출연금액 × 300%)]</p> <p>㉡ 투자제외방법 = [기업소득 × 15% - (임금증가액 +<br/>상생협력 출연금액 × 300%)]</p> </div> <p>○ (기업소득 가산항목) 국세환급금 이자<br/>익금불산입액,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<br/>손금산입액 등</p> <p>○ (기업소득 차감항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</li> <li>- 법령상 의무적립금</li> <li>- 이월결손금</li> <li>-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</li> <li>-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<br/>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</li> </ul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소득 산정시<br/>차감항목<br/>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&lt;삭 제&gt;</p> |

〈개정이유〉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17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104의15)

|   |   |
|---|---|
|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4의15) >                   |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자원 직·간접 취득을 위한 투자·출자금액의 3% 세액공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광업·조광권 직접 취득, ②외국법인의 지분 취득, ③해외자회사를 통한 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세액공제 대상 투자, 출자범위 및 세액공제액 추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</li> </ul>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출자) 출자비율 10%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①, ②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, ②광구 개발·운영 목적 설립</li> </ul> </li> <li>○ (투자) 외국자회사*에 대한 다음의 투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%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</li> <li>- 내국인*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</li> <li>- 내국인*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</li> <li>-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*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</li> <li>*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%를 보유한 내국인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 <div>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정세액 범위: ① + ②          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 <p><b>① (세액공제액 상당액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·회수한 경우<br/>               : 세액공제액 × <math>\frac{\text{이전·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}}{\text{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}}</math></li> <li>-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<br/>               : 세액공제액 전액</li> </ul> <p><b>② (이자상당가산액)</b> 1」 추정대상 일수 × 2」 이자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」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</li> <li>2」 1일 10만분의 22</li> </ul> </div> </div> |

<개정이유>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18)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(조특령 §104의21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4의24) >

- ☐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
-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<br>○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·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<br><br>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<br><br><삭 제><br>* 법률로 상향입법<br><br>○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*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<br><br>*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<br>- 유사성 판단 기준,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|

<개정이유>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

(19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등 규정 (조특령 §104조의30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04의33) > —

- 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
- \*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시 매년 대여금 기말채권잔액의 10%까지 손금 인정
- 해외건설자회사 요건, 대여금의 범위,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신청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건설자회사 요건</p> <p>○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현지법인</p> <p>○ 국내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% 이상* 보유</p> <p>* 대여금을 지급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지주회사가 출자지분의 90%이상 보유하는 해외건설사 포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</p> <p>○ 대여금 및 그 이자</p> <p>○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(① 또는 ②)</p> <p>①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잠식*인 경우</p> <p>* 누적 결손금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이거나, 순자산 평가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</p> <p>② ①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</p> <p>○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</p> |

<개정이유>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(20)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(조특령 §116의2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제자유구역·새만금사업지역<br>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·<br>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성장·원천기술 관련<br/>연구개발업</li> </ul> </li> <li>○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투자금액 1,0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업, 전기통신업 등</li> <li>-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/ul> |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3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

(21)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
(조특령 §116의15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·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광호텔업·수상관광호텔업</li> <li>-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, 관광식당업, 마리나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산업, 노인복지시설, 국제학교, 청소년수련시설, 교육원, 의료기관 등</li> <li>- 궤도사업,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</li> <li>- 식료품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, 곡물가공품·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, 기타 식품 제조업,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제외</li> </ul> </li> <li>- 음료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알코올 음료 제조업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▪ (삭 제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▪ (삭 제)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(22)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116의21 등)

|   |  |
|---|--|
| <p align="center"><b>&lt; 법 개정내용 (조특법 §121의17·19) &gt;</b></p>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도시,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“평화경제특구” 신규 추가</p> |  |
| <p>○ 적용지역, 투자·고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</p> 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</p> <p>○ (적용지역)</p> <p>① 기업도시개발구역</p> <p>② 지역개발사업구역 등</p> <p>③ 여수해양박람회특구</p> <p>④ 새만금투자진흥지구</p> <p align="center">&lt;추 가&gt;</p> <p>○ (창업기업 투자·고용요건)</p> <p>- (연구개발업) 투자금액 5억원, 상시근로자 10명 이상</p> <p>- (물류·유통업) 투자금액 10억원, 상시근로자 15명 이상</p> <p>- (제조업 등) 투자금액 20억원, 상시근로자 30명 이상</p> <p>○ (개발사업 투자요건)</p> <p>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지역 확대</p> <p>○ (적용지역)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⑤ 평화경제특구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평화경제특구 투자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(23)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116의36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21의33) >

☐ 기회발전특구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기업 세액감면 제도 신설

\* 5년간 100% 이후 2년간 50% 소득·법인세 감면

- 감면대상 업종, 투자누계액 정의, 상시근로자·청년상시근로자 범위, 서비스업 정의,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추정세액 계산 방법,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대상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, 연구개발업,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누계액의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*에 대한 투자 합계액</li> </ul> <p>*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, 건설 중인 자산, 무형자산(영업권, 상표권, 특허권, 광업권 등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·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상시근로자)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(청년 상시근로자) 상시근로자 중 15~34세(병역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)인 근로자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·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(청년)상시근로자 수의 합}}{\text{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}}</math> </p> |



|  |   |
|--|---|
| 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서비스업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·임·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의 수 감소 시 추정세액 계산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*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</li> </ul> <p>* 청년,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, 그 외 상시근로자 1,500만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신청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(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</li> </ul> |
|--|---|

**〈개정이유〉**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

**〈적용시기〉** '24.1.1.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(24)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(조특령 §130⑦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36⑥) >   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 |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* 신설 |
| * '기본한도+수입 금액별 한도'의 10% 추가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적용 제외 지출액<br>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소비성서비스업* 지출액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(조특령 §29③)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등</div> |

〈개정이유〉 전통시장 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< 증여세 · 양도소득세제 >

### (1)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

(조특령 §27의6·§68)

####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30의6·§71) >

- ☐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조세포탈·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·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하고,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 
⇒ 벌금형의 범위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벌금형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세포탈의 경우: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%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인해 받은 벌금형</li> <li>○ 회계부정의 경우: 이사 등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받은 벌금형*</li> </ul> <p>*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: 증여세액 × ❶ × ❷</p> <p>❶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역형·벌금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</p> <p>❷ 1일 10만분의 22</p> |

<개정이유>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범위 등 구체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(2) 농·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 
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(조특령 §63⑭·§64⑪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□ 농지등을 농·어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 100% 감면 또는 이월과세 특례 적용 요건</p> <p>○ (소재지 거주) <sup>1)</sup>농지등 소재 시·군·구, <sup>2)</sup>과 연결한 시·군·구, <sup>3)</sup>농지등으로부터 30km 이내</p> <p>○ (자경기간) 4년 이상</p> <p>-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□ 자경기간 요건 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</p> <p>- (좌 동)</p> <p>-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*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</p> <p>*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: 3억원<br/>제조업, 숙박업 등: 1.5억원<br/>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 등: 0.75억원</p> |

〈개정이유〉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3)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(조특령 §67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<br>세액감면<br><br>○ (대상) 4년 이상 종전 농지<br>소재지에 거주한 자<br><br>○ (요건) ❶ & ❷ & ❸<br><br>❶ 직접 경작한 토지<br><br>❷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<br><br>❸ 종전·신규농지 경작기간을<br>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<br><br>○ (감면율) 100%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명확화<br><br>○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<br>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<br>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height: 150px; margin-left: 20px;"></div> ○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양도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명확화

(4)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(조특령 §67의2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70의2) >

- ☐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 환급\* 대상에 농업인의 상속인과 축사용지도 포함

\*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직접 경작·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중

-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, 환매한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자경 농지등 양도세 특례의 적용방법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* 환매 시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등</p> <p>*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</p> <p>○ (환급신청) 농업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, 매매·환매계약서 사본 제출</p> <p>○ (자경기간) 환매한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임차·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특례* 적용</p> <p>*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100% 감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,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</p> <p>○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</p> <p>○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* 적용</p> <p>* 8년 이상 직접 축산 시 양도세 100% 감면</p> |

<개정이유>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5)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 
요건 합리화(조특령 §7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*의 사후관리 요건</p> <p>*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세 40% 감면 또는 과세이연</p> <p>○ 감면세액(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) + 이자상당액 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매금지 위반</li> <li>-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</li> </ul> <p>○ 대토보상과 현금보상(10% 감면)의 감면세액(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)의 차액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등</li> <li>- 해당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</li> </ul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대토를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 되는 분부터 적용

(6)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(조특령 §116의37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21의34) > —

- ☐ 수도권에서 3년(중소기업 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
  - 특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 납부
- ☐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,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,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 :<br>본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, 데이터센터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이연 대상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<br><br>$\text{양도차익상당액} = \text{양도차익} * \times \frac{\text{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가액}}{\text{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가액}}$ <p>* 단,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</p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구 내 부동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 폐지로 간주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< 금융세제 >

### (1) 투자신탁형 창업·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(조특령 §1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·투자<br>확인서* 발급<br>*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<br>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<br>○ 발급주체<br>- 벤처투자조합 관리자<br>-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자<br>-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<br>업자, 투자신탁을 취급하는<br>금융사 등<br>-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<br>기구의 업무집행사원<br><br>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자·투자확인서 발급주체 확대<br><br>○ (좌 동)<br><br>-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<br>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|

〈개정이유〉 투자신탁형 창업·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

(2)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 
(조특령 §1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<br>과세특례<br><br>○ (적용대상) 벤처투자조합<br>등에의 출자<br><br>○ (소득공제) 출자금액의 10%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 신설&gt;</div><br><br>○ (적용기한) '25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*에 대한<br>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<br><br>* 특수목적에 대한 60% 이상 투자 의무만<br>있으며, 창업·벤처기업 투자 의무는 없음<br>(「벤처투자촉진법」 §35)<br><br>○ (좌 동)<br><br>○ (좌 동)<br><br>- 다만,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<br>출자한 경우는 아래 산식에 따름<br><br>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[\text{출자금액} \times \text{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}] \times 10\%</math> <p style="margin: 0;">*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<br/>÷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</p> </div><br>○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벤처투자 유인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3)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 
요건 완화(조특령 §43의8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자 등*이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**<br>*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<br>**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<br>○ (재투자 요건) 본인보유 주식의 30% 이상 양도하고, 양도대금 중 50%이상 재투자<br>○ (재투자 기한)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일*부터 1년 이내<br>*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<br>○ (적용기한) '26.12.3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투자기한 연장<br>○ (좌 동)<br>○ 1년 이내 → 2년 이내<br>○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

(4)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(조특령 §84의4, §93의6)

— 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87의7, §91의20) > —

- ☐ 청년형 장기펀드, 공모 부동산펀드 등 가입자가 다른 적격펀드에  
전환 가입시 의무가입기간(3년) 내 해지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
- 전환 가입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형 장기펀드, 공모 부동산펀드* 전환가입 요건<br>* 공모리츠·상장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전환가입 관리의 어려움을<br>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 |
|       | <b>❶</b>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<br>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(동일 계좌 유지)에 가입<br><b>❷</b>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<br><b>❸</b>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<br>기간이 3년 이상일 것 |

〈개정이유〉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
〈적용시기〉 '24.4.1.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(5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편입대상 K-OTC 중소·중견기업  
주식 범위 합리화(조특령 §93의4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ISA 편입대상인 K-OTC*<br/>중소·중견기업 주식**의 범위</p> <p>*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<br/>비상장주식 거래 시장</p> <p>** K-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<br/>중소·중견기업에 한해 ISA 편입 허용</p> <p>○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<br/>따른 중소기업</p> <p>-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<br/>: ISA 편입 직전 3개연도<br/>매출액 평균</p> <p>○ (중견기업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<br/>따른 중견기업</p> <p>-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<br/>: ISA 편입 당해연도 매출액<br/>(다음연도 3월에 확정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·중견기업 범위 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</p> <p>▪ 매년 1~3월 중 ISA 편입시<br/>: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<br/>매출액 평균</p> <p>▪ 매년 4~12월 중 ISA 편입시<br/>: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</p> <p>○ 「중견기업법」에 따른 중견기업</p> <p>-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</p> <p>▪ 매년 1~3월 중 ISA 편입시<br/>: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<br/>매출액 평균</p> <p>▪ 매년 4~12월 중 ISA 편입시<br/>: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</p> |

〈개정이유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대상 K-OTC 주식 범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(조특령 §93의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<br>비과세 특례 가입대상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<br>6개월 이상인 군장병*<br><br>*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<br>전환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소 가입기간 완화<br><br><input type="radio"/> 6개월 이상 → 1개월 이상 |

〈개정이유〉 장병의 목돈마련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(조특령 §93의8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*</p> <p>* 의무가입기간(5년)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천재지변, 사업장 폐업</li> <li>○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퇴직, 상해·질병(3개월 이상 요양 필요)</li> <li>○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, 파산신고 등</li> <li>○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<p>○ 가입자의 혼인, 출산<br/>(배우자의 출산 포함)</p> |

〈개정이유〉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
(조특령 §93의10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1의24) >

☐ 저축지원 금융상품\*을 가입·연장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

\*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, 서민형 ISA, 청년희망적금, 청년형 장기펀드, 청년도약계좌

○ 소득 기준연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 기준연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직전연도 소득 적용</li> <li>○ (예외) 1~7월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*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 적용</li> </ul> <p>* 국세청장은 매년 6~7월 기간 중 직전연도 소득 확정<br/>매년 5.31 이전에 '직전연도 소득 확정일'을 고시</p> |

〈개정이유〉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저축 등의 소득요건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



(9)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(조특령 §116의38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121의38) >

☐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하여 9% 분리과세 적용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&lt;신 설&gt;</b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, 「민간투자법」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, 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: 60% 이상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대상자산의 범위(①+②+③+④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사용권<br/>(다만,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제외)</li> <li>② 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</li> <li>③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</li> <li>④ “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”으로 발행된 입주기업의 “채권 및 주식”에 대한 투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입주기업) 특구 이전기업 또는 특구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부장관이 “입주예정기업”으로 확인한 중소·중견기업도 포함</li> </ul> </li> <li>- (채권투자)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발행일 취득*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통 중인 채권의 취득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- (주식투자) 입주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및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시 해당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# < 부가가치세제 >

### (1)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조특령 §106⑦(62) 신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<br>업무 대행단체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정우체국, 한국농어촌공사 등<br/>공공기관, 산림조합, 지방공사,<br/>지방공단, 전자수입인지 업무<br/>위탁기관 등 43개 대상 열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장애인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

### (2)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(조특령 §109의2②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개요) 외국인관광객이 공급<br/>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<br/>가치세 환급</li> <li>*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<br/>환급창구(출국장, 도심)에서 환급</li> <li>○ (대상)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상<br/>관광호텔업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 대상 호텔 범위 확대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「관광진흥법」상 호텔업*</li> <li>* (범위)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<br/>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<br/>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4.4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(3)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(조특령 §112의6②(6) 신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 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</li> <li>○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납품(사실)증명서 발급내역</li> <li>○ 외국항행선박·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 확인서 발급내역</li> <li>○ 면세유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·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·단속내역</li> <li>○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료 제출 범위 위임 근거 신설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<p>○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·등록 인가 허가 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</p> |

〈개정이유〉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

## 11. 국세기본법 시행령

### (1)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(국기령 §6의4①②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부고지서</li> <li>○ 국세환급금통지서</li> <li>○ 신고안내문</li> <li>○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류 범위 확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촉장</li> </ul>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부고지서</li> <li>○ 국세환급금통지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류 범위 확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촉장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서류를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

(2)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(국기령 §9의3③ · §9의4①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부위원<br>○ 세제실장(위원장)<br>○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<br>○ 법제처·국세청·관세청·조세심판원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위원 요건 조정<br>○ (좌 동)<br>○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<br>○ 법제처·국세청·관세청·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위원 지명 등 철회<br>○ 기재부: 위원장(지명자)이 철회<br>○ 법제처·국세청·관세청·조세심판원: 해당 기관장(추천자)이 철회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명 철회자 조정<br>○ 기재부장관(지명자)이 철회<br>○ (좌 동)   |

〈개정이유〉 국세예규심 위원회의 전문성·대표성 제고 등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지명·추천·철회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국세예규심사위원회,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 
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(국기령 §9의3⑫, §63의17⑬, §66⑥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위원 제척 기준<br><br><b>①</b>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<br>(과거 조력자도 포함)<br><br><b>②</b>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<br>(과거 친족도 포함)<br><br><b>③</b>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<br>(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)<br><br><b>④</b> 대상처분(세무조사 포함)이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·심사 청구·심판청구에 관여한 경우<br><br><b>⑤</b> 최근 5년 내 대상처분(세무조사 포함)이나 당사자 관련 신고·신청·청구에 관여한 경우<br><br><b>⑥</b>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에 현재 속하거나 최근 5년 내 속하였던 경우<br><br><b>⑦</b> 그 밖에 당사자·조력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척 기준 합리화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           ○ (좌 동)<br/><br/><br/>           ○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<br/>(질의일·세무조사 착수일·명단 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)         </div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회의 소집 분부터 적용

#### (4)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(국기령 §27의5)

##### — < 법 개정내용(국기법 §47의4③) > —

- 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도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
- 평가방법 차이는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·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<br><br>○ 상속재산(증여재산)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·증여세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<br>* 상속·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<br><br><b>&lt;추 가&gt;</b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신설<br><br>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3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>  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  </div> </div><br>○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<br>*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|

**<개정이유>**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

**<적용시기>**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(5)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(국기령 §48의2③ 신설)

— < 법 개정내용(국기법 §59의2①) > —

- ☐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
- 대상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요건<br><br>○ 개인<br>-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<br>-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<br>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<br><br>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display: inline-block;">             ○ (좌 동)           </div><br><br>○ 법인<br>- 수입금액 3억원 이하<br>- 자산가액 5억원 이하 |

〈개정이유〉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4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

(6)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 
(국기령 §53⑧, §63의17⑥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</li> <li>○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</li> <li>○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,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완화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(법무·회계·세무법인·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)에 소속되어 있거나,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

(7)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(국기령 §53⑭, §62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<br>○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(시행규칙)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<br>○ 5천만원 미만(시행령)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·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<br>○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<br>(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 확대<br>○ 5천만원 미만<br>(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) |

〈개정이유〉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

(8)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(국기령 §55의2③신설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</li> <li>○ 「세무사법」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</li> <li>○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취업심사대상기관(법무·회계·세무법인·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)에 소속되어 있거나,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(국기령 §58②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심리자료 사전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관회의 개최 전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함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분청에 대한 사전열람 거부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>- 심판청구인은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,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①각하결정 사유, ②소액 심판 사유에 해당시 거부 가능</p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심판 운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(국기령 §58⑤ 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<br>○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<br>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지 방법 명확화<br>○ (좌 동)<br><br>- 통지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,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편의 제고

(11)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(국기령 §62의3②③④신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심판결정서의 송달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접 수령</li> <li>○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송달 허용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height: 100px; width: 100%; margin: 10px 0;">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공시송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요건)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</li> <li>2.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/ol> </li> <li>- (방법) 주심 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세심판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</li> <li>2.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</li> </ol> </li> <li>- (효력) 공시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효력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

(12)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(국기령 §63의14①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<br>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정성 확보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보호시스템 구축</li> <li>- 업무담당자 지정</li> <li>- 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<br/>여부 주기적 점검</li> <li>○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점검<br/>결과 제출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<br>확인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과세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의<br/>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<br/>용도로 사용 확인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위반한 분부터 적용

(13)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(국기령 §63의15①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❶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○ ❷국세청장의 훈령·예규·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○ ❸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</li> <li>○ ❶~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○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 사유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10억원 → 5억원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(14)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(국기령 §65의4⑮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&lt;신 설&gt;</p> <p>* 「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」 제2조제4호 상향 입법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발급 의무 위반시 신고기한</p> <p>○ 의무 위반시부터 5년</p> |

<개정이유>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(15)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 
(국기령 §27의2)

|   | 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법 개정내용(국기법 §47의3)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</p> <p>○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</p> <p>→ 구체적인 ‘부득이한 사유’는 시행령으로 규정</p> |  |
|---|--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</p> <p>○ 시설인정*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**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,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<br/>(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)</p> <p>*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(조특령 §9⑮)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,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</p> <p>** 조특법 §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</p> |

<개정이유> 납세자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12. 국세징수법 시행령

### (1)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(국징령 §31·32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장성보험의 보험금, 해약 환급금, 만기환급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</li> <li>ii) 치료·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</li> <li>iii) 그 외 보험금의 50%</li> <li>iv)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</li> <li>v)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2 이상 보험계약 시: i), iv), v)는 합산하여 계산, iii)은 보험계약별로 계산</p> <li>○ 185만원 미만 예금·적금 등</li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1천만원 → 1천5백만원</li> <li>ii) (좌 동)</li> <li>iii) (좌 동)</li> <li>iv) 150만원 → 250만원</li> <li>v) 150만원 → 250만원</li> </ul>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총액의 1/2은 압류금지</li> <li>○ (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액의 1/2 &lt; 185만원 : 185만원까지 압류금지</li> <li>- 총액의 1/2 &gt; 300만원 : 300만원 + 300만원 초과액의 50%*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월 총급여 600만원 초과분은 1/4만 압류금지 효과</p>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압류 제한 기준금액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85만원 → 250만원</li> <li>- (좌 동)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영세채납자 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 
공동이용 근거 추가(국정령 §5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<br>○ (목적) 압류재산의 처분<br><추 가><br>○ (대상) 다음 정보의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법무부) 출입국·외국인등록·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</li> <li>- (행정안전부)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주민등록전입세대</li> <li>- (국토교통부) 토지(임야)대장, 건축물대장, 자동차등록원부, 건설기계등록원부</li> <li>- (해양수산부) 선박원부</li> <li>- (대법원) 법인·토지·건물등기 사항증명서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이용 목적 추가<br>○ (좌 동)<br>-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추가<br><br>○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

(3)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 
(국징령 §60의2)

|   |  |
|---|--|
| < 법 개정내용(국징법 §84의2 신설) >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  |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매 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제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</li> <li>○ 신청 대상, 절차 등 시행령 위임</li> </ul>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·저당권·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</li> <li>○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*이 있는 임차인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§3의2②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§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</p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*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담보설정계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</p> |

〈개정이유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구체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13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(1) 특정외국법인(CFC\*)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(국조령 §64)

\* CFC[Controlled Foreign Company : 거주자·내국법인과 특수관계(50%이상 소유 등)인 해외투자법인]에 이자·배당·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(해외지주회사 특례) 판정 요건</p> <p>○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: 90%</p> <p>※ 소득금액비율 = <math>\frac{A(\text{이자·배당소득})}{B(\text{전체 소득})}</math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(A)에 자회사 이자·배당소득 예·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</p> <p>* 이자·배당소득 예·적금 이자만 합산하며,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</p> |

〈개정이유〉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2)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 
(국조령 §75, §146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36·37·38·89) >

- ☐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정보 용어·범위 정비
- (제공주체) 금융회사등(금융실명법 §2(1)) → 금융거래 법인·단체
  - (대상정보) 금융정보(금융실명법 §2(3)) →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·자료
- ⇒ 금융거래 법인·단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·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거래 법인·단체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, 기은, 산은, 수은, 농협·수협은행, 상호저축은행·중앙회</li> <li>- 보험회사</li> <li>-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·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</li> <li>-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및 중앙회</li> <li>- 여신전문금융회사, 신기술사업투자조합</li> </ul> </li> <li>○ 추가기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·일임업자, 집합투자기구</li> <li>-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·단체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고시 상향규정 및 범위 조정</p> 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·자료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·자료</li> <li>○ 특정금융거래법 §2(2)(나)의 거래 정보·자료</li> </ul>   |

<개정이유>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

### (3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(국조령 §95)

#### 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54(1)) >

- 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
-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</p> <p>❶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,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* 적용을 받는 자</p> <p>*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</p> <p>❷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*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, 급여에 대해 조약·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</p> <p>*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만,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</p> |

〈개정이유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4)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 
(국조령 §97, §99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</p> <p>○ 과세당국 요구*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</p> <p>*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(법 §56①)</p>                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</p> <p>○ 관할 세무서장 →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</p>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</p> <p>○ 과세당국 요구*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</p> <p>*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(법 §59①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</p> <p>○ 관할 세무서장 →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</p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5)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(국조령 §98, §148, 별표)

— 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58, §59, §91) > —

- ☐ 거주자·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
- 제출내용,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* 하는 경우 구체화</p> <p>* 실질적 지배·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</p> <p>○ 위탁자가 ❶신탁계약 해지권, ❷수익자 지정·변경권 또는 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신탁재산 가액</p> <p>❶ 원칙 : 시가</p> <p>- 현금·주식·채권·집합투자증권·보험·가상자산은 시가기준일*의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봄</p> <p>* 1)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, 2)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·이전일</p> <p>❷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* : 취득가액</p> <p>*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과태료 부과기준)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%(최대 1억원)</p> |

〈개정이유〉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('26.1.1. 이후 자료 제출)



## (6)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

###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(국조령 §100② 신설)

#### 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61) >

##### ☐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

-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정부기업(국부펀드)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

※ 국부펀드가 최종모기업이 되어 추가세액 부담하는 것 방지('23.2 OECD 행정지침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기업 중 국부펀드의 정의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</li></ul> |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(국조령 §107의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66⑤) >

- ☐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
- (원칙)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계산시 미포함
  - (특례)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체화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사업장 손실을 본점에 배분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사용된 경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③ 추가세액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(국조령 §116의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69③·④) >

☐ 추가세액 비율이 15%를 초과\* 시

\*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,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

①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%로 세액계산

② 15%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에 차감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전 사업연도에 추가세액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후속사업연도 배분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</li> <li>○ 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</li> </ul> |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 
(국조령 §118의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70⑤2) >

- ☐ 적격소재국추가세로서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경우
- 적격추가세를 제외한 추가세액 < 0
  - 적격추가세제도가 시행령이 정한 회계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것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의 요건</p> <p>❶ (회계요건)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</p> <p>-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</p> <p>❷ (일관성요건)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하거나 많을 것</p> <p>❸ (운영요건) ❶·❷ 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</p> |

〈개정이유〉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(국조령 §125④ 신설)

— 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73④산식) > —

☐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</p> <p>❶ 글로벌최저한세 규칙(OECD합의)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</p> <p>❷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</p> |

〈개정이유〉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(국조령 §129④ 신설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76④) >

- ☐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 취득·처분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계산할 때 조직재편 특례에 따라 장부가액 사용(과세이연) 원칙
-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부가액의 공정가액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의 계산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조정 사업연도)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음 ①,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① 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에 반영</li> <li>▪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에 반영</li> </ul> </li> <li>○ (조정 이후 사업연도)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을 사용</li> </ul> |

<개정이유>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(국조령 §136④ 신설, §137① 신설)

|   |  |
|---|--|
| 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79⑤·⑥) >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)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        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과세분배방식의 적용요건)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과세가 예상되는 등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시과세처리방식 요건 구체화 : ① 또는 ②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<br>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<br>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「보험업법」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<br>○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|

〈개정이유〉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·주석서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(국조령 §144⑦ 신설)

< 법 개정내용(국조법 §87①3) >

☐ 신고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전환기\*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

\* 개시일이 '26.12.31. 이전이고, 종료일이 '28.6.30. 이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(❶~❺ 중 하나 충족)</p> <p>❶ 글로벌최저한세소득·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</p> <p>❷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</p> <p>❸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</p> <p>❹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</p> <p>❺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</p> |

〈개정이유〉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

## 14. 관세법 시행령

### (1)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(관세령 §1의3⑤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</li> <li>○ (예외)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</li> <li>-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</li> <li>-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,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

## (2)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·보관 방법 구체화(관세령 §3)

### 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2) >

- ☐ 신고·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  
에서 보관하도록 규정
-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·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한 자료에 한해<br/>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</p> <p>○ 수입·수출·반송신고필증<br/>: 신고·제출 → 보관</p> <p>○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<br/>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<br/>등 관련 자료*</p> <p>: 신고·제출 생략 → 미보관</p> <p>* 수출입거래 관련 계약서, 보세운송<br/>관련 자료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<br/>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<br/>서 보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신고·제출을 생략한 자료도<br/>보관하도록 변경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<br/>장치에 작성·보관하는 기준</p> <p>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·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<br/>②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·문서화할 수<br/>있는 장치 및 절차를 마련<br/>③ 거래내용 등의 검색·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<br/>작성·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<br/>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</p> <p>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<br/>② 자산 취득·양도로 기명날인·서명한 계약서<br/>③ 소송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판결문 사본<br/>④ 인가·허가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인·허가증</p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

(3)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(관세령 §17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평가 제1방법*의 적용대상</p> <p>*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</p> <p>○ 적용물품</p> <p>-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</p> <p>○ 적용제외</p> <p>-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</p> <p>-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등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명확화</p> <p>○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</p> <p>-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,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</p> <p>○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-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</p> <p>-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물품 등</p> |

〈개정이유〉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

#### (4)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(관세령§6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□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</p> <p>○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<br/>*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</li> <li>- 제출거부자: 단일덤핑율<br/>*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</li> </ul> <p>○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</p> <p>↳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, 개별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의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<br/>*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</li> <li>- 자료미제출자: 평균덤핑율<br/>*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</li> </ul> <p>○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: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</li> <li>- 특수관계 없음: 개별덤핑율<br/>* 요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조사 후 개별공급자별 덤핑율</li> </ul> <p>※ 평균덤핑율 적용 규정은 없으나, 개별 부과 규칙을 통해 적용 중</p> | <p>□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</p> <p>○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(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/ul> <p>○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관계 없음: 평균덤핑율</li> <li>-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<br/>다만,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</li> <li>-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: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<br/>다만,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율</li> </ul> <p>*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(별도 부령)에서 운용 중인 사항 명확화</p> |

〈개정이유〉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

(5)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(관세령 §71의2 신설 등)

— 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56의2 신설) > —

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

-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
-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회덤핑 정의: ‘사소한 변경’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(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)</li> <li>○ 우회덤핑 조사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역위원회 조사개시: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</li> <li>- 조사 기간: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(1개월 연장 가능)</li> <li>-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</li> <li>- 결정 기한: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(1개월 연장 가능)</li> <li>-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절차: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

〈적용시기〉 ‘25.1.1.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용도세울 전용물품 신청방법(관세령 §97)

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83①) >

- ☐ 용도세울 전용물품은 용도세울 적용 신청 생략 가능
-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(‘용도세울 전용물품’)에는 용도세울 적용신청 생략 가능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울 전용물품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물품의 품명, 규격,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*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</li> <li>*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</li> <li>○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용도세울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

(7) 관세포탈법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(관세령 §141의5)

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2) >

- ☐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법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
- \* (현행)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
- 명단공개 제외사유, 공개내용·기간,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</p> <p>○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내용·기간,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</p> <p>○ (공개내용) 관세포탈법의 성명, 나이, 직업 등</p> <p>○ (공개기간) 5년(상습범인 경우 10년)</p> <p>○ (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)</p> <p>- (납부의무 세액·과태료·벌금을 미납한 경우)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</p> <p>- (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)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</p> |

<개정이유>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(관세령 §141의11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이 출국금지·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천만원 이상 관세채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</li> <li>-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</li> <li>- 명단이 공개된 고액·상습 채납자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<br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 포탈범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조세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(9)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

###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(관세령 §141의13①)

|  |  |
|--|--|
| — 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6①) > —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</li> </ul> |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&lt;신 설&gt;</b> |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신용정보법」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, 본인정보를 전송·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·신뢰성,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</li> </ul> |

**<개정이유>**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
**<적용시기>** '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(관세령 §141의13②, 별표2의2)

|  |   |
|--|---|
| <p>———— 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6②) &gt; ————</p> |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|
| ○  |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         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|
|       | ○ 「관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과세정보*       |
|       | * 「관세법 시행령」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 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·주기·기한 등 규정  
(관세령 §141의13③~⑥·⑪)

|  | 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6⑦) &gt;</p>   | 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</p> <p>○ 전송 요구방법·주기·기한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</p> |  |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&lt;신 설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·주기</p> <p>○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, 정기적 전송요구 가능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전송 기한 및 방법</p> <p>○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</p> <p>○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,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방법</p> <p>○ 서면 또는 전자문서, 그 밖에 안전성·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필요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</p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④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(관세령 §141의13⑦)

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6④) >

- ☐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
- 납세자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, 관세청이 전송거절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관세청은 과세정보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가능</p> <p>○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</p> <p>○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</p> <p>○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</p> <p>○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○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</p> <p>○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(관세령 §141의13⑧~⑩)

|  | 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116의6⑨) &gt;</p>    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 제공 대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</li> </ul> |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&lt;신 설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세정보 유출·변조 등의 방지시스템 구축</li> <li>○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</li> <li>○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</li> <li>○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에 제출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
(관세령 §265의3 별표6)

|   | 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77의3①) &gt;</p>  | 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*를 추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관세사, 세무사, 전기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등</p> <p>○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</p>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</p> <p>○ 과태료 부과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주체 동의 하에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*</li> <li>* 국가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은행, 기타 급부·지원 관련 기관</li> <li>-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과태료 부과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위반건수 x 50만원’과 500만원 중 큰 금액(2천만원 한도)</li> </ul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*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관세사, 세무사, 전기통신사업자 중 관세청이 고시하는 자 등</p> <p>○ (좌 동)</p>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‘24.7.1.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일시적 수출입 제한·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(관세령 §244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통관보류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○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세관장에게 국세, 지방세의 강제징수(채납처분)가 위탁된 해당 채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</li> <li>○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-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보류 사유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10px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<p>-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·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 |

〈개정이유〉 수출입 제한·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(관세령 §251의2)

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46의2) >

- ☐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‘물품’에서  
‘물품 등’으로 개정하여 대상 확대\*

\*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<br>○ 손실보상 대상<br>- 검사대상 물품<br><추 가><br>○ 손실보상 금액<br>- 수리할 수 없는 경우 :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<br>- 수리할 수 있는 경우 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|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<br>- (좌 동)<br>- 포장용기, 운송·운반수단<br>- 수리할 수 없는 경우<br>1) 검사대상 물품 :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<br>2) 포장용기, 운송·운반수단 :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(구매가격 한도 내)<br>- (좌 동) |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리 보호

〈적용시기〉 '24.3.1.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



(12)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(관세령 §263의3)

|   |  |
|---|--|
| 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64의11) >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<br>○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<br>○ 외교부<br>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범죄로 체포·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(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)의 개인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<br>○ 법무부<br>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<br>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<br>- 최근 10년간 마약밀수·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,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<br>○ 식품의약품안전처<br>-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<br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<br>-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,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|

〈개정이유〉 마약밀수 차단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(관세령 §263의2 별표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은 국가기관·지자체 등에 과세자료 제출요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무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의 출입국 심사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○ 행정안전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산세 부과·징수 자료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국세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해외현지법인 명세서</li> <li>-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</li> <li>-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</li> <li>-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</li> <li>-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</li> <li>-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 경비 배분계산서</li> <li>-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</li> <li>- 영세율 매출명세서</li> <li>○ 공공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## (14)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

-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
(관세령 §265의2 별표5)

|  | 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16, §277 ) &gt;</p>                   | 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p> |  |
| <p>○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</p>  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 관련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p> <p>○ 의무위반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세운송 통로 준수 위반</li> <li>- 보세운송 기간 준수 위반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과태료 부과 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차 위반) 50만원, (2차 위반) 100만원, (3·4차 위반) 200만원</li> </ul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<p>-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○ (좌 동)</p> </div> |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
(관세령 §265의2 별표5)

<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77) >

☐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 
5천만원 이하 과태료\*로 변경

\* 단,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·세관장의 조치 위반, 검사의  
거부·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→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○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<br>○ 직무집행 거부·기피 등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<br>- (1차) 1천만원, (2차) 2천만원, (3차) 3천만원,<br>(4차) 5천만원<br>○ 단,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조치 위반,<br>검사의 거부·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<br>- (1차) 100만원, (2차) 200만원, (3차) 300만원,<br>(4차) 400만원 |

〈개정이유〉 민간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형벌을 과태료로 전환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

(15)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(관세령 §285의2, §285의3 등)

|  |  |
|--|--|
| <p align="center">— &lt; 법 개정내용(관세법 §277, §327의2 등) &gt; —</p>   | 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방식이 아닌 공공기관(관세정보원) 전담체제로 전환</p> <p>○ 기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·절차 등을 삭제하고, 관세정보원의 설립기준·과징금 기준 등을 규정</p>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등 규정</p> <p>○ (지정기준) 정보처리시스템 구축, 기술인력 보유 등</p> <p>○ (지정절차) 관세청에 서류 제출</p> <p>○ (과징금 기준) 1억원 이하 부과</p> <p align="center">&lt;추 가&gt;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</p> <p align="center">&lt;삭 제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정보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부과</p> <p>* (1차) 100만원, (2차) 200만원, (3차) 300만원, (4차) 500만원</p> |

〈개정이유〉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

〈적용시기〉 '24.7.1.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

## 15. 기타 개정사항

### (1)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(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)

| 현행  | 개정안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</div> <div>&lt;추가&gt;</div> |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</div> <table><thead><tr><th>과세자료명</th><th>제출기관</th><th>제출시기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수입·수출 통관목록 자료</td><td>관세청</td><td>매월 10일</td></tr><tr><td>국가 패소 소송('조상 땅 찾기' 소송)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</td><td>한국자산관리공사</td><td>매년 3월 31일</td></tr></tbody></table> | 과세자료명     | 제출기관 | 제출시기 | 수입·수출 통관목록 자료 | 관세청 | 매월 10일 | 국가 패소 소송('조상 땅 찾기' 소송)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| 한국자산관리공사 | 매년 3월 31일 |
| 과세자료명   | 제출기관  | 제출시기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수입·수출 통관목록 자료   | 관세청   | 매월 10일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국가 패소 소송('조상 땅 찾기' 소송)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자산관리공사  | 매년 3월 31일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

(2)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
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§6①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,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, 축산업주업법인 등</li> <li>○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)</li> <li>- 농업용 무인항공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,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농민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(3)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 
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§17①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등<br>① 농업용 트랙터·콤바인<br>② 농선(10톤 이상)<br>③ 연근해·연안구역 어업용선박, 내수면어업용 선박(10톤이상,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한정)<br>④ 농업용난방기, 버섯재배 소독기, 곡물·농산물건조기<br>- 등유,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 실적 확인장치(시간계측기) 부착 제외대상 확대<br><br>○ (좌 동)<br><br>- 등유,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|

〈개정이유〉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


(4)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 
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§20의3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유 공급명세 홈페이지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개 주체) 면세유류 관리 조합</li> <li>○ (조합 공개 항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성명</li> <li>- ② 주소</li> <li>- ③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</li> <li>- ④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</li> <li>- ⑤ 농기계등의 보유현황</li> </ul> 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면세유류 관리 조합 및 중앙회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중앙회 공개 항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</li> <li>- ②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</li> <li>- ③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</li> <li>- ④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</li> </ul> </li> </ul> |

<추 가>

〈개정이유〉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분부터 적용

(5) 부가가치세 영세율·사후환급 적용대상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확대  
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<br>○ 임신진단기 등 39종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변경<br>○ 임신진단기<br>→ 가축 생체정보수집기*<br>* 체온 등 생체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, 분만 알림 등 기능을 갖춘 기자재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대상 농·임업용 기자재<br>○ 농업용 필름·파이프 등 63종<br>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대상 추가<br>○ (좌 동)<br>○ 다접보온커튼, 농업용 관비기, 농업용 양액기, 스마트팜 센서류·구동기류·복합환경제어기                       |

〈개정이유〉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

(6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 
(FTA관세령 §46의2 신설)

|  |  |
|--|--|
| <법 개정내용(FTA관세법 §35의2 신설)>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<b>보정이자* 징수·면제규정 신설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p>* 보정기간(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) 이내에 납세의무자(수입자)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</p> |  |
| <p>○ (징수) 기산일(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),<br/>이자율(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)</p>            |  |
| <p>○ (면제)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</p>        |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하는 이자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*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</li> </ul> <p>* 年 1천분의 29(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)</p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면제사유: 가산세 면제사유 준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*</li> </ul> <p>*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,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</li> <li>○ 상대국 수출자·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·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/ul> |

<개정이유>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

<적용시기> '24.3.1.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(7)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 
(FTA관세령 별표3, 별표4, 별표10,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)

| 현행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FTA관세법 시행령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FTA협정에 따라 정비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○ 유럽자유무역연합*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(별표3)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품목번호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1610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1610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0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 EFTA(4개국)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○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(별표4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품목번호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098910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코넛 주스(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 | 40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98910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코넛 주스(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 | 0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(별표10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품목번호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71332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| 0<br>(666메트릭톤이하)<br>188<br>(666메트릭톤초과) | 071332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| 0<br>(666메트릭톤이하)<br>180<br>(666메트릭톤초과)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WTO 양허관세규정(시행령)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<input type="checkbox"/>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○ 품목별 세율(별표1의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품목번호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명                   | 세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410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곤충(식용)               | 19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410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곤충(식용) 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식용설육(신선·냉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8.0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식용설육(염장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2.5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식용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9.7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069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상시험 키트              | 6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69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상시험 키트   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설탕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9.7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조제 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54.0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6.2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조제점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6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822900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인증표준 물질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22900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인증표준 물질  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뉴스용 필름의 것 등(10개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6.5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(6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8~50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52411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       |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2411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   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LCD가 결합된 표시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0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- 기타 액정디바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3.0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* 실제 적용세율은 관세법 기본세율 8.0% 적용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
〈개정이유〉 FTA 및 WTO 협정의 적정한 이행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-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3, 별표10 및 WTO 양허관세규정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에도 적용

(8)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 
(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)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혜관세 적용 대상 최빈개도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탄*·방글라데시·앙골라·네팔·수단·아이티 등 46개국</li> <li>* 적용시한 : '23. 12. 12.</li> </ul>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시한 도래 국가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탄 삭제</li> </ul>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빈개도국 대우 종료 예정 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솔로몬제도 : '24. 12. 12.</li> <li>○ 앙골라 : '24. 2. 11.</li> <li>○ 상투메프린시페 : '24. 12. 12.</li> <li>○ (신 설)</li> </ul> | <input type="checkbox"/>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한 연장 : '27. 12. 13.</li> <li>○ 시한 삭제 : 무기한 연장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방글라데시·라오스·네팔 : '26. 11. 23.</li> </ul> |

〈개정이유〉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결의 등 반영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
(앙골라) '24. 2. 12.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도 적용